

JB Weekly Web Magazine

| 2026.02.04

“ Your Gateway to Global Trade ”



Contents

- 0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4년 만에 재도입 p.1
- 02 관세청 덤프행위 상시 차단! 덤프방지관세 부과 대상 연중 관세조사 p.3
- 03 "수출 핵심은 원산지 관리" 관세청, 중소수출기업 원산지 컨설팅 p.4
- 04 중기부, 고환율 부담 완화에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제도·현장 지원 추진 p.6
- 05 2025년 전국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역대 최대 "환적 물량 증가" p.7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4년 만에 재도입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대상... 2월 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4년 만에 다시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0일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를 공개하고, 오는 2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 도입돼 2022년 말 종료된 이후 일몰 상태였으나, 화물운송 현장의 안전 문제와 제도 재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약 4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운임 제도다. 안전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으로 구분된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적정 운임을 보장함으로써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물류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운임 제도다. 운임은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으로 구분된다.

이번 고시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적용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안전운임제 일몰 이전에 고시된 운임과 비교할 때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의 안전위탁운임은 13.8%, 시멘트 품목은 16.8% 인상됐다. 화주가 부담하는 안전운송운임 역시 각각 15.0%, 17.5%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운임 인상은 과거 고유가 상황이 반영됐던 2021~2022년 당시와 비교하면 낮아 보일 수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당시 적용됐던 유가를 현재 수준으로 조정한 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운송 여건을 고려한 부대조항도 함께 보완됐다. 냉동·냉장장치가 부착된 컨테이너를 발전기가 장착된 차량으로 운송하면서, 주간 화물자동차 운행 제한으로 별도 허가가 필요한 지역을 통과할 경우 해당 구간 운임의 30% 이상 할증이 적용된다. 이는 험로·오지 운행 등 다양한 현장 상황을 운임에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4년 만에 재도입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대상... 2월 1일부터 시행

정부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에 따라 제도의 현장 정착을 위한 관리·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거나 운임이 미지급되는 사례를 접수하기 위해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합동조사 등 사후 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다시 시행되는 만큼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업계에서도 운임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운송 1회당 운임

(단위: 만 원)

왕복 거리 (km)	컨테이너 운임(왕복)				시멘트 운임(왕복)	
	40FT		20FT			
	안전위탁운임	안전운송운임	안전위탁운임	안전운송운임	안전위탁운임	안전운송운임
100	281,500	318,000	244,600	277,000	194,000	211,400
200	390,900	443,400	346,000	392,400	293,200	319,400
300	502,700	571,200	441,000	501,400	384,000	418,300
400	610,800	695,300	531,400	605,800	476,400	519,000
500	707,500	808,000	621,700	710,100	562,400	612,600
600	814,800	931,300	733,100	835,500	697,800	760,100
700	905,900	1,038,400	804,900	921,300	825,200	898,900
800	1,002,800	1,151,300	881,300	1,011,700	887,800	967,100

※ 자료: 국토교통부
 ※ 본 운임표의 운임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은 부산신항·광양항과 배후단지 제외
 ※ 제주지역 제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평균 인상률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6년
컨테이너	안전운송운임	-	3.84%	1.68%	...	15.0%
	안전위탁운임	12.5%	1.93%	1.57%		13.8%
시멘트	안전운송운임	-	8.97%	2.67%		17.5%
	안전위탁운임	12.20%	5.90%	2.66%		16.8%

※ 자료: 국토교통부
 ※ 본 운임표의 운임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은 부산신항·광양항과 배후단지 제외
 ※ 제주지역 제외

2

관세청 덤프행위 상시 차단! 덤프방지관세 부과 대상 연중 관세조사

불공정무역 전담조직 신설·정기 덤프심사 도입으로 상시 대응체계 구축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 외국산 저가제품의 덤프 공세가 거세지자, 관세청이 국경 단계에서 불공정무역을 차단하기 위한 상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026년부터 불공정무역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덤프 단속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덤프방지관세 부과 품목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정기 덤프심사제도'를 전격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기존의 일회성·기획 단속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연중 상시 감시와 조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덤프 조사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5건에 불과하던 덤프 조사 건수는 2024년 10건, 2025년에는 13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관세청은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해 공급자 및 품목번호 허위신고 등을 통한 덤프방지관세 탈루 행위 428억원 상당을 적발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성과를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상시 대응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주요 세관에 총 4개 전담팀을 신설해 단속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정기 덤프심사제도'의 도입이다. 기존에는 이슈 품목이 발생하면 일정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됐지만, 앞으로는 덤프방지관세가 부과된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연중 관세조사가 진행된다. 2025년 12월 말 기준 덤프방지관세 부과 대상은 열간압연 후판제품, 석유수지, 폴리아미드 필름, 백시멘트 등 총 28개 품목에 달한다.

관세청은 신규 덤프방지관세 부과 품목은 물론, 철강과 석유화학제품 등 덤프 이슈 품목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점도 대응 강화의 핵심이다. 기존에는 덤프물품 공급국 내에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미한 변경만으로 덤프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만 규제 대상이었으나, 2026년부터는 제3국이나 국내 보세구역에서의 경미한 변경, 제3국에서의 조립·완성 행위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회덤핑 의심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덤프방지관세 부과 전후의수입량·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경 여부, 환한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회피 시도를 조기에 포착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한층 강화한다. 반덤핑 정책과 집행 과정에서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산업계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응 실효성을 높일겠다는 것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품명이나 공급자를 허위 신고하는 행위는 정부의 반덤핑 조치를 무력화하는 만큼 반드시 차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수출 핵심은 원산지 관리” 관세청, 중소기업·소상공인 원산지 컨설팅

2월 2일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컨설팅 시행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관세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관세청은 2월 2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강화 추세에 대응해 수출기업의 사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원산지 관리 미흡으로 인한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기업에는 원산지 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방문해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모의 원산지 검증 실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등 원산지 관리 전반을 아우른다.

특히 올해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대미 수출 중소기업을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재미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효과를 높이고자 관세청은 상반기 내 사업을 집중적으로 마무리해 중소 수출기업이 원산지 관리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관세청은 동일 사업을 통해 총 364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이 중 243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신규 인증을 받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받았다. 또한 177개 기업은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해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환경을 구축했다.

2026년도 사업은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6개 세관에서 진행되며, 기업 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와 컨설팅 평가등급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약 134개 기업으로, 대미 수출기업이 1순위로 선정된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3

“수출 핵심은 원산지 관리” 관세청, 중소기업 원산지 컨설팅

2월 2일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컨설팅 시행

관세사의 휴업·폐업 및 사무소 이전·폐지 신고, 통관취급법인 등의 사무소별 1명 이상의 관세사 배치 규정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관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됐다.

사업 개요

사업명	2026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사업 기간	2026년 2~6월											
지원 대상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약 134개 기업)											
지원 내용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대비 '자문전문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관세사가 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상담 제공, 컨설팅 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기업에 지원											
지 절차	<table border="1"> <tr> <td>사업 공고</td> <td>신청 및 접수</td> <td>업체 선정 및 컨설턴트 배정</td> <td>컨설팅 수행 및 완료</td> </tr> <tr> <td>2월 2일</td> <td>2월 9일~2월 20일</td> <td>2월~3월</td> <td>3월~5월</td> </tr> </table>	사업 공고	신청 및 접수	업체 선정 및 컨설턴트 배정	컨설팅 수행 및 완료	2월 2일	2월 9일~2월 20일	2월~3월	3월~5월			
사업 공고	신청 및 접수	업체 선정 및 컨설턴트 배정	컨설팅 수행 및 완료									
2월 2일	2월 9일~2월 20일	2월~3월	3월~5월									
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대미 수출기업 · (2순위) 사업수행 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소상공인 우선 선정 등 											

출처 : 관세청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9일부터 20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월 4일부터 6일까지 각 세관에서 열리는 사업설명회와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 '공고·공지사항'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서 원산지 관리의 수출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국제 무역 규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4

중기부, 고환율 부담 완화에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제도·현장 지원 추진

정책자금 대출 상환 만기 연장 및 환리스크 지원 대상 확대 검토

고환율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금융·제도·현장 밀착형 지원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29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고환율 애로점검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고환율로 인한 경영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조·유통·식품 분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원부자재를 수입·공급하는 대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고환율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전국 15개 지역 수출지원센터로 접수된 환율 관련 애로를 분석한 결과, 원부자재 수입비용 증가와 물류·보험비 상승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고환율로 인해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제조원가와 판매가격이 동시에 상승해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기업일수록 원부자재 대량 구매를 미루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이 공유됐다. 중소기업들이 환율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정책자금 만기연장 검토... 금융 부담 완화

중기부는 우선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집중될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 상환 만기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율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상환 여력이 부족한 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환율 충격이 기업 경영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수출기업 중심으로 운영돼 온 환리스크 정책 지원도 대상을 넓힌다. 중기부는 15개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제공해온 환리스크 상담과 교육을 수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내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원가 상승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간 1,000건 규모의 '납품대금 연동약정 컨설팅'을 통해 수입 원자재의 연동약정 체결을 확산할 예정이다. 연동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수·위탁 거래 관련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도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원가 상승에 특히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 지원도 병행된다. 중기부는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경영안정바우처를 최대 25만원 한도로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만 6,000개사를 대상으로 스마트기술 보급을 지원해 비용 절감과 경영 효율화를 돕는다.

중기부는 전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고환율 관련 현장 애로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수집된 의견을 관계부처에 신속히 전달해 환율 대응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정책실은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현장과 정책 간 연결고리를 강화할 취지라고 전했다.

5

2025년 전국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역대 최대 “환적 물량 증가”

무역항 총 물동량은 전년 대비 0.9% 감소

고환율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금융·제도·현장 밀착형 지원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29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고환율 애로점검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고환율로 인한 경영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항만의 총물동량이 소폭 감소한 가운데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적 물량 증가에 힘입어 컨테이너 처리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부산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대비 2% 증가한 2488만TEU로 역대 최고 실적을 1년만에 갈아치웠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총물동량이 15억 7,101만톤으로, 전년(15억 8,565만톤) 대비 0.9% 감소했다고 1월 30일 밝혔다. 수출입 물동량은 13억 4,125만톤(0.7% 감소), 연안은 2억 2,976만톤(2.1% 감소)으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3,211만TEU로 전년보다 1.2%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환적 물량 증가로 컨테이너 처리량 ‘최대’

2025년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0.9% 감소한 1,753만TEU를 기록했으나, 환적 물동량이 1,441만TEU로 전년 대비 3.8% 늘어나 전체 물동량 증가를 견인했다.

국가별로는 중국(2.3%)과 일본(9.8%)과의 수출입 물동량이 늘어난 반면, 대미 수출입 물동량은 4.2% 감소해 전체 수출입 물동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전국 무역항 컨테이너 물동량(2025년)

(단위 : 1,000TEU, 전년 대비 %)

구분	2024년	2025년				
		10월	11월	12월	4분기	1~4분기
총물동량	31,735	2,577	2,665	2,725	7,966	32,109
전년 대비	5.3	△3.8	2.7	△0.2	△0.5	1.2
수출입	17,685	1,333	1,447	1,523	4,302(△2.9)	17,532(△0.9)
환적	13,889	1,230	1,202	1,184	3,616(2.4)	14,414(3.8)
연안	162	14	16	18	48(20.2)	163(1.1)

출처 : 해양수산부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5

2025년 전국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역대 최대 “환적 물량 증가”

무역항 총 물동량은 전년 대비 0.9% 감소

특히 주요 항만 가운데 부산항이 전년 대비 2.0% 증가한 2,488만TEU를 처리했다. 대미 물동량이 소폭 감소(△0.2%)했는데도 중국(3.4%), 일본(3.7%) 물동량이 증가한 영향이다.

부산항의 수출입 물동량은 1,078만TEU로 1.1% 감소했으나, 환적 물동량은 1,410만TEU로 4.4% 증가했다. 수출입에서는 말레이시아(58.6%)와 일본(11.1%)의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환적에서는 중국(5.0%)과 미국(5.6%)의 물동량이 늘었다.

반면, 인천항은 전년 대비 3.2% 감소한 344만TEU를 처리했다. 태국, 대만, 베트남 등과의 수출입 물동량 감소와 국제 통상 불확실성에 따른 중간재 교역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환적 물량 역시 미 관세 유예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선사의 항로 조정 영향으로 20.2% 줄었다.

2025년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10억1,813만 톤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인천항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차량 및 그 부품 물동량이 5.8% 증가한 반면, 유류·광석·유연탄·철강 등 주요 원자재 물동량은 대부분 감소했다. 특히 유류 물동량은 2.0%, 유연탄은 2.4%, 철강은 2.1% 각각 줄었다.